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IR-20100701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

- 02 요약
- 04 조사개요
- 07 회전문인사의 현황
- 19 제언

끊임없이 들고 있는 회전문, 그리고 회전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1. 회전문 인사란?

회전문 인사란 주로 민간 기업/단체 등에 활동하던 퇴직 공직자를 다시 공직에 발탁해 임명하는 경우를 말함. 회전문 인사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청탁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움. 특히 고위 공직자는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고 따라서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2. 회전문 인사의 현황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6월말 까지 임명된 정부 44개 기관의 88개 직위에서 활동한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55명(169명 중 중복 14명)의 경력 및 재산을 분석한 결과 23명의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회전문인사에 해당함.

회전문 인사 23명(14.8%) 중 ▲퇴직 공직자가 기업/협회/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 한 후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에 재임용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13명(8.4%), ▲학교/정치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인사가 8명(5.2%), ▲퇴직 공직자가 공기업에서 근무한 경우가 2명(1.3%) 이었음.

공직경험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직위에 기용되었으나 회전문 인사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최초공직경력을 주요경력으로 볼 수 없는 공직자가 3명(1.9%), 공직자가 퇴직 후 선출직공직에서 활동하고 임명직에 기용된 경우도 3명(1.9%), 공직공백기간이 너무 짧아 별다른 경력이 없는 경우도 1명(0.6%)명이 있음.

3. 회전문 인사와 재산

회전문 인사에 해당하는 23명 중 공직공백기간 동안 재산증감이 분석 가능한 16명에 대하여 재산증감현황을 분석하였음. 분석대상 전원이 공직 공백 기간 동안 재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16명의 평균 공직공백기간은 약 2년 5개월이며 공직공백기간 동안 16명의 재산은 20,673,692,000원 늘었고 평균증가액은 12억 9천만원에 달함. 이 중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회전문인사에 해당하는 8명만 비교하면 평균 공직공백기간은 3년 3개월이며 평균 18억 4천여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음.

김경한 장관 6년간 약 49억의 재산 증가, 김희선 전 국정원 제2차장 2년 11개월간 45억원 증가, 원세훈 국정원장 3년간 24억 증가 등이 대표적임. 강만수 현 경제특보도 재정경제원차관 퇴직 이후 10년간 25억 가량의 재산이 늘어났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년 7개월간 4억 5천여 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음.

4. 돌고 있는 회전문을 멈춰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회전문 인사를 지양해야함. 특히 현재처럼 회전문 인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현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청탁거절이 곤란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행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 명문화하고 검증의 범위를 넓혀야함. 인사 대상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함.

○ 조사 대상 :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6월 말¹ 까지 44개 기관 즉, 청와대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등 15부 및 산하 18청 (총 44개 기관)의 전·현직 장·차관급 직위 88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해당직위에 임명된 사람이 총 169명(중복)이고 14명이 해당직위에 다시 임명되어 155명이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전문 인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물 23명을 선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회전문 인사는 퇴직공직자가 민간/공기업 등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공직경력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직위에 기용되었으나 회전문인사분류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공직경력이후 민간에서 활동하다가 공직에 임명되었으나 최초 공직을 주요경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였고 퇴직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로 활동하다 임명직에 다시 기용된 경우, 공직공백기간이 너무 짧아 별다른 경력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제외하였다.

각 기관별 조사 대상인원은 <표1>과 같다.

<표1> 조사 대상 및 인원 (중복)

대상 기관	대상 직위	전직 인원	현직 인원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등 10개 직위	14	8
감사원	원장	1	1
국가정보원	원장 및 1,2,3차장	4	4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및 국무/사무차장	2	3
특임장관실	장관	0	1
법제처	처장	0	1
국가보훈처	처장, 차장	1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2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1	2
기획재정부	장, 차관	4	3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청장	각 1
	조달청	청장	2

1 이 보고서는 2010. 6.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교육과학기술부		장, 차관	3	3
외교통상부		장, 차관	2	3
통일부		장, 차관	2	2
법무부		장, 차관	3	2
법무부 산하기관	검찰청	청장	1	1
국방부		장, 차관	2	2
국방부 산하기관	병무청, 방위사업청	청장	1	각 1
행정안전부		장, 차관	4	3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찰청, 소방방재청	청장	각 1	각 1
문화체육관광부		장, 차관	2	3
문화체육관 광부 산하기관	문화재청	청장	0	1
농림수산식품부		장, 차관	3	3
농림수산식 품부 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청장	각 1	각 1
지식경제부		장, 차관	4	3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청, 특허청	청장	1	각 1
보건복지부		장, 차관	2	2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식약청	청장	1	1
환경부		장, 차관	1	2
환경부 산하기관	기상청	청장	1	1
노동부		장, 차관	2	2
여성가족부		장, 차관	4	2
국토해양부		장, 차관	1	3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각 1	각 1
소계			84	85
합계			44개 기관	169명

- 해당직위에 169명 중 14인은 2개직에 임명되어(중복) 155명임

○ 조사 내용 :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의 공직 임명 전 경력과 퇴직 후 경력 등을 조사하여 회전문 인사에 대한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다.

○ 참고 자료 : 장·차관급 인사의 임명/재직/퇴직 시 전자관보에 공개된 공직자재산공개, 인사청문회 자료 및 각종 언론 보도 등을 참고로 하였다.

○ 조사대상을 44개 기관의 88개 직위에 임명된바 있는 155명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조사의 한계가 있다. 또한, 회전문 인사의 재산비교는 최초 퇴직시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직위에 있어 관보 등에 재산이 공개된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회전문 인사란

○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회전문 인사란 주로 민간 기업/단체 등에 근무하던 퇴직 공직자를 다시 공직에 발탁해 임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전문 인사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아 임명될 경우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고위 공직자는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고 따라서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는 도덕성·능력 및 성과 등이 주요 검증 기준이 되지만 이해충돌의 가능성도 공직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회전문 인사도 하나의 결격사유 내지는 검증대상이라 할 수 있다.

○ 회전문 인사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직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해충돌 회피제도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막고 있는 업무연관성 기업의 취업의 경우 보다 더 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회전문 인사를 제한하는 제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문인사를 통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는 임명권자의 책임이 매우 크다.

○ 이해충돌의 회피는 공직자와 국가가 동시에 가지는 의무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에 앞서 국가의 의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직자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해 본인이 알아서 회피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회전문 인사는 공직을 통해 전문성을 쌓은 이들이 민간에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다른 경험을 쌓고 다시 공직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퇴직공직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하다. 퇴직 후 사기업에 취업했던 인사가 공직에 재임용된다면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 로비를 거절했던 현직공직자보다 높은 직위로 기용되어 불이익을 주거나, 회전문인사가 직전 소속했던 사기업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런 회전문 인사가 되풀이 된다면 퇴직 후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을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예비상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더 큰 이해충돌을 부를 수밖에 없다.

2. 기업/협회/법률사무소 활동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란 주요경력이 공직인 퇴직 공직자가 공직공백기간 동안 기업/협회/법률사무소 등에서 활동 후 다시 고위 공직에 발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직 퇴직 후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사외이사를 맡거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해충돌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 회전문 인사로 분류한 23명 중 13명이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에 해당한다.

○ 회전문 인사의 공직공백기간의 경력을 보면 공직공백기간 동안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한 경우는 7명으로 매우 높다. 그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한 경우는 4명으로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부처 출신으로 김앤장 고문을 거쳐 공직으로 기용되었고, 김희선씨의 경우는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공직에 다시 기용되었다. 김앤장은 국내최대법률사무소로 행정각부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해 전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 필요하지만, 김앤장은 조합 형태로 되어있어 자본금이 없어 현재의 공직윤리법으로는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윤증현 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7년 8월,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2008년 1월부터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의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근무했다. 윤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앤장의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고위공직자의 급여가 많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못 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라며?’ 답변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행정고시 합격자로 공직에 처음 발을 디뎠으며 변호사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회전문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한승수 전 총리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한승수 전 총리의 공직 경력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13,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3대 상공부 장관과 15대 주미대사, 3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2004년 6월부터 총리로 내정되었던 2008년 2월까지 김앤장의 고문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냈다. 2009년 9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후인 2009년 10월부터 다시 김앤장의 고문으로 옮겨갔다. 2010년 1월부터는 스탠더드차터드 그룹 비상임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2003~2006.05)을 지낸 후 6개월 후부터 부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만 근무했으며 행정고시 출신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승수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

2 파이낸셜 뉴스 (2009-02-06) - 김앤장 출신 윤증현 “공직자는 그런데도 못가나?”

려져 있다.

<표2>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가나다 순, 괄호는 재직년월)

	성명	주요 공직 경력	공직 외 주요경력	재임용 공직	퇴직 후 경력
1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97~98) 제9대 서울시정개발연구 원 원장(05~07)	무역협회 부회장 (99~00)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 원(03)	기획재정부 장관 (08.02.~09.0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 관 (09.02~)	공직 유지
2	김경한	법무부 차관(99~01) 서울고검 검사장(01~02)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02~08) 코오롱 인터내셔널 사외이사 (02) GS건설 사외이사(04) 두산 사외이사(06) 하이닉스 반도체 사외이사 (07)	법무부 장관 (08.02~09.09)	KH법률연구소 변호사
3	김필규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 사(04~05)	김필규 법률사무소 변호사 (05~08)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 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08.03~)	공직 유지
4	김희선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기획관리실 실장 (05),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5) 두산건설 사외이사(07)	국가정보원 제2차장 (08.03~09.02)	김앤장 법률사 무소 변호사
5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05.06~07.02)	우리금융지주 회장 (07.03~08.06)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 관 (08.06~09.01)	동부건설 사 외이사 (10.04~)
6	박성도	국가정보원 정보판단실 실장(05)	SK에너지 상임고문(05) SK해운 감사(08~09)	국정원 제2차장 (09.02~)	공직 유지
7	변무근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정 부 작 전 참 모 부 장 (99~01) 해군 교육사령관(02~03) 해군 소장 예편(03)	현대중공업(주) 상무 (03.08~06.12)	방위사업청장 (09.01~)	공직 유지
8	서동원	기획예산처 재정개혁단장 (01)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06)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06)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 장 (08.03~09.08)	자료 없음
9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실장(97)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08)	기획재정부 장관 (09.02~)	공직 유지

		아시아개발은행이사(99) 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 원장(04~07)			
10	윤진식	산자부 장관(03) 산업대 총장(04~07)	단국대 이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 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 (08)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 관 정책실장 (09.09~10.05)	7.28 총주 국 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11	정동기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 사(02) 법무부 차관(06)	법무법인 바른 공동 대표변 호사(07)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 관 (08.06~09.07)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09.09~)	공직 유지
12	최 경 환 ³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실 보좌관(97)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 담당관(98~99)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99~0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02.04~02.09) 서울은행 사외이사(02) 이회창 대통령 후보 경제특보 (02)	지식경제부 장관 (09.09~)	공직 유지
13	한승수	13,15, 16대 국회의원 34대 상공부 장관 (88~90) 15대 주미 대사(93~94) 3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 원 장관(96~97) 30대 외교통상부 장관 (01~0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04) 한국신용정보 사외이사(05)	제39대 국무총리 (08.02~09.09)	김앤장 법률사 무소 고문 (09.10~) 스탠더드차터 드 그룹 비상 임이사 (10.01~) 맨스필드 재단 이사 (10.04~)

3. 교수/정치권 활동 인사

○ 공직 퇴직 후 정치권에서 활동하거나 교수 등 비 경제분야에 활동한 경우는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직위 없이 자문 등의 형태로 기업이나 협회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는 KT사외이사로 추천 되었으나 활동하지 못하고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기도 했다.

3 최경환 장관은 17,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현역 의원으로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음.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에 임명된 경우이나 민간활동경력을 감안하여 전형적 회전문인사에 포함하였음.

○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은 공직공백기간 동안 대불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로 활동했으며 이견무 문화재청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 퇴임후 용인대 문화재대학원장으로 재임하다 문화재청장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공직공백기간동안 교수활동외에는 다른 활동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외이사, 기업고문 등 알려지지 않은 별도의 활동이 없다면 이해충돌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표3> 교수-정치권 활동인사 (가나다 순, 괄호는 재직년월)

	성명	주요 공직 경력	공직 외 주요경력	재임용 공직	퇴직 후 경력
1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02~05)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03) 한림대 총장 (07.01~08.02)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08.02~08.0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 (08.08~10.04) 한국은행 총재 (10.04~)	공직 유지
2	원세훈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03~06) 국제환경기구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집행위원(06)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상근특보 (07)	행정안전부 장관 (08.02~09.01) 국가정보원장 (09.02~)	공직 유지
3	이견무	국립중앙박물관장(03)	용인대 문화재대학원장(08)	문화재청장 (08.03~)	공직 유지
4	이만의	6대 환경부 차관(02~03)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03~06)	2012여수엑스포유치위원회 상임집행위원 (06~07)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광주선대위원장 (07)	환경부 장관 (08.03~)	
5	이인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실장(03)	조선일보 조선경제 자문단 (03)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04~07) 서강대 교수(06)	통계청장 (09.05~)	공직 유지
6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04)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정책팀장(07)	조달청장 (08.03~09.01) 국방부 차관 (09.01~)	공직 유지
7	정종환	21대 철도청 청장(9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02)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04~07)	선진국민총남연대 대표(07) 우송대 철도건설환경공학과 교수(07)	국토해양부 장관 (08.02~)	공직 유지
8	최성룡	소방간부후보생 1기(77) 행자부 소방국 방호과 과장(99~00)	대불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05)	소방방재청장 (08.03~09.10)	자료 없음

	중앙소방학교 교장 (00~02)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본 부장(02~04)			
--	---	--	--	--

4. 공직퇴직 후 공기업 활동 인사

○ 공직자가 퇴직 후 공기업을 거쳐 다시 정무직 등의 공직에 임명되는 경우 <표4>으로 정리하였다. 공직퇴직 후 공공기관에서 활동한 경우 비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역임), 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역임)도 우송대 교수, 정치권 활동경력도 있어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4> 공공기관/공기업 회전문 인사 (가나다 순, 선출직 공무원 포함)

	성명	공직 경력	공기업 활동 등	재제임용 공직
1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05)	한국도로공사 사장(07)	국토해양부 1차관 (08.03~)
2	최장현	해양수산부 공보관(00) 해양수산부 차관보(0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 본부장(07)	제9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08.07~09.01)	국토해양부 2차관 (09.01~)

5. 회전문 인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 퇴직공직자가 선출직공직에서 활동하다 임명직공직에 기용된 경우는 회전문인사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표5>로 정리하였다. 공직공백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의 활동여부에 따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회전문인사와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실장으로 지목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하영제 농림부 2차관이 해당된다.

<표5> 퇴직공직자 출신 선출직공직자 중 임명직에 기용된 인사 (가나다 순)

	성명	공직 경력	선출직 공직	재기용 공직
1	임태희	청와대 경제수석실 근무(98) 임명	16,17,18대 국회의원 선출	노동부 장관 임명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산업 경제과장(99)	임명	(00~08)		(09.09~)	
2	전재희	노동부 이사관(93)	임명	광명시장(94~98) 16,17,18대 국회의원 (00~)	선출 선출	보건복지가족부 장 관 (08.08~)	임명
3	하영제	행자부 민간협력과, 교부세 과 과장(98)	임명	남해 군수 (02.07~07.12)	선출	산림청장 (08.03~09.01) 농림부 2차관 (09.01~)	임명
		진주시 부시장(99)	임명				

○ 이석연 법제처장(법제처, 헌법재판소 근무)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경제기획원 근무), 정정길 대통령 실장(농림수산부 근무)의 경우도 공직경력 이후 민간에서 활동하다가 공직에 임명되었으나 최초 공직경력을 주요경력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제외하였다.<표6>

<표6> 최초공직을 주요경력으로 볼 수 없어 회전문 인사에서 제외한 경우 (가나다 순)

	성명	공직 경력	공직 외 경력	재임용 공직	퇴직 후 경력
1	이석연	법제처 사무관(80~8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89~94),	한전 사외이사, KT/POSCO 고문 변호사(03), 감사원 정 책자문위 위원장(04), 뉴라 이트 상임공동대표(06), 법 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 (07~)	법제처장 (08.03~)	공직 유지
2	이윤호	경제기획원 사무관 (73~78)	력키금성경제연구소 대표이 사 소장(93), LG경제연구원 고문(07), 전경련 상근부회 장(07~08)	지식경제부 장관 (08.02~09.09), 주 러 시아 대사 (10.01~)	공직 유지
3	정정길	농림수산부 기획계장 (69~71)	울산대학교 총장(03~08), 울산방송 사외이사(07)	대통령실 실장 (08.06~)	공직 유지

○ 공직공백기간이 너무 짧아 별다른 경력이 없는 경우도 회전문 인사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최종경 경제수석은 공직공백기간이 매우 짧아 다른 경력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로 정책실패로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너무 짧은 시간에 다시 공직에 임용하여 '보은인사', '둘러막기'라는 비판이 있다.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물가인상 등 피해가 잇따르자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특히 2008년 7월, 당시 전 사회적으로 강 장관에 대한 경질요구가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최 차관 경질로 여론 무마를 시도했고, '대리 경질'이라는 따가운 여론의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스스로 "장관을 대신해 경질한 게 아니라

별도의 책임을 맡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⁴ 최중경 현 경제수석 비서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 경질된 지 한 달여 만에 필리핀 대사로 임명 받았다. 이에 대해 여권조차도 경질 대상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⁵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의 일 뿐 아니라, 대사로 부임한 후 한진중공업 필리핀 법인의 산재사고를 조사하는 필리핀 상원에 서한을 보내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표7> 공직공백기간이 너무 짧고 별다른 경력을 찾을 수 없어 회전문인사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 (가나다 순)

	성명	공직 경력	공직공백기간경력	재임용 공직
1	최중경	재정경제부 금융국 국장(03)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05~07) 기획재정부 제1차관 (08.03~08.07)	공직공백기간이 약 1.5개월로 별다른 경력을 찾을 수 없었음	주 필리핀 대사관 대사 (08.09~10.02)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10.03~)

6. 회전문 인사의 재산 증식 사례

○ 본 보고서에서는 회전문인사의 공직공백기간의 재산 증감여부를 비교⁶ 했다. 비교대상은 관보 등을 통해 최초퇴직 당시 재산을 공개한 직위에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는 총 16명이다. 16명의 평균 공직공백기간은 약 2년 5개월이며 공직공백기간 동안 16명의 재산은 206억 7,369만 2,000원이 늘었고 평균 12억 9천만원에 달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회전문인사에 해당하는 8명⁷ 만 비교하면 평균 공직공백기간은 3년 3개월이며 평균 18억 4천여만원의 재산이 늘어났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문인사 대상자의 전부가 공직공백기간 동안 수십억에서 수억까지 많은 액수의 재산이 늘어났다. 퇴직자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으며 그로 인해 그만큼 이해충돌의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퇴직공직자의 퇴직금 수령, 상속,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

4 파이낸셜 투데이 (2010-04-12) - 두 차례 환란 주역에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 [인물]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대리경질 1년 반 만의 승진복귀

5 한국일보 (2008-08-14) - [사설] 여당 내부서도 비판하는 보은 인사

6 재산이 공개되는 직위는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공기업의 기관장/부기관장/감사, 공직유관단체장 등이다. 재산공개는 신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 또는 등록의무 면제, 퇴직, 재등록 시 부터 1개월 이내이며 재산 공개는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 관보 등에 게재된다. 본 보고서는 관보/공보/시보 등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임, 퇴직 시 날짜와 관보 게재 날짜와는 두 달 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7 강만수, 김정환, 김희선, 박병원, 서동원, 윤중현, 윤진식, 정동기 등 8명의 공직자가 이에 해당한다.

○ 최고의 증감액을 기록한 인물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으로 서울고검 검사장 퇴직시 재산공개 금액은 842,518,000원이고 약 6년 후 법무부 장관 임용 당시 신고한 금액은 7배인 5,730,704,000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4,888,186,000원에 달한다.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사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코오롱 인터내셔널, GS건설, 두산 하이닉스 반도체등 국내 대기업의 사외이사 직을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상속과 부동산 가격 인상 등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인이 고가의 핸드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며, 부인이 소유한 부산의 상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에 뒤지지 않는 재산가는 김희선 전 국정원 제2차장이다. 법무부 실장을 퇴직할 당시 공개한 재산은 1,787,765,000원 (2005년 5월 25일자 관보)이나, 국정원 제2차장으로 임명될 당시 공개한 재산은 약 4배가량 더 많은 6,316,459,000원 이고 늘어난 재산은 4,528,694,000원 이다. 김희선 전 차장은 법무부 실장을 퇴직한 후 약 3년간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변호사로 근무하며 두산건설의 사외이사도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재직 시 형사, 특수 분야의 수사 경험이 풍부했던 김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 시 산업 안보 등 경제 정보 업무를 책임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정원 퇴직 후 다시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기업형 사'분야의 변호사로 되돌아갔다.

○ 원세훈 현 국정원장도 공직 공백기간 막대한 재산을 일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끝으로 공개된 재산은 총 560,009,000원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의 경력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의 집행위원으로 당선 된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될 당시 공개한 재산은 2,398,073,000원으로 약 3년 동안 약 4배가 증가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개된 이력으로는 그 재산 형성 과정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 강만수 현 경제특보는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 청문회 시 보유한 주식에 관련한 논란에 전량 매도했고, 재정경제원 차관 퇴직시 신고한 금액이 616,515,000원이었으나 장관 임명시 공개한 금액은 3,105,526,000원으로 10년 동안 약 4배 이상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만수 경제특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직할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강만수 특보는 강남의 아파트와 경기도 인근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강 특보는 김영삼 정부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외환위기에 책임이 있다. 이후 오랜 기간 야인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재산은 크게 늘어났다.

<표8> 공직/공공기관/공기업 출신 회전문 인사의 재산 공개 내역 (가나다 순, 괄호는 관보공개 연월일, 단위 천원)

성 명	공직 최초 공개	공직 외 경력	재임용 공직 최초 공개 ⁽²⁾	최근 경력
		공직 최종 공개 ⁽¹⁾	공직 외 경력 기간 ⁽³⁾ (=2)-(1))	재임용 퇴직/최근 공개

1	강만수	국회재무위원회 소속시 490,818 (93.09.07)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 원(03) 등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시 3,105,526 (08.04.24)	국가경쟁력강 화위원회 위원 장 대통령실 경제 특별보좌관 (09.02~)
		재정경제원 차관 퇴직시 615,515 (98.04.24)	10년	기획재정부 장관 퇴직 시 2,992,788 (09.04.03)	2,490,011
2	김경한	의정부지청장 임명시 294,311 (93.11.01)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02~08) 코오롱 인터내셔널 사외이사 (02) GS건설 사외이사(04) 두산 사외이사(06) 하이닉스 반도체 사외이사 (07)	법무부 장관 임명시 5,730,704 (08.04.24.)	KH법률연구소 변호사
		서울고검사장 퇴직시 842,518 (02.03.07)	약 6년 1개월	법무부 장관 퇴직시 5,121,149 (09.10.30)	4,888,186
3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임 명시 696,307 (02.09.19)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한림대 총장(07.01~08.02)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 서관 임명시 2,042,442 (08.04.24)	한국은행 총재 (10.04~)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퇴 직시 1,017,534 (05.09.15)	약 2년 6개월	경 제 협 력 개 발 기 구 (OECD)대사 재직 2,009,175 (10.05.07)	1,024,908
4	김희선	서울동부지청장 임명시 1,635,335 (03.05.20)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5) 두산건설 사외이사(07)	국가정보원 제2차장 임 명시 6,316,459 (08.04.24),	김앤장 법률사 무소 변호사
		법무부 실장 퇴직시 1,787,765 (05.05.25)	약 2년 11개월	동직 퇴직시 5,276,364 (09.04.16)	4,528,694
5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임명 시 2,166,664 (03.11.01)	우리금융지주 회장 (07.03~08.06)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 서관 임명시 3,556,499 (08.08.22)	동부건설 사외 이사 (10.04~)
		차관 퇴직시 2,879,863 (07.03.30)	약 1년 5개월	동직 퇴직시 3,623,599 (09.03.27)	676,636
6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06)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 장 임명시	자료 없음

		583,997 (03.08.01)		2,210,153 (08.04.24)	
		동직 퇴직시 696,691 (06.07.28)	약 1년 9개월	동직 퇴직시 1,806,835 (09.09.25)	1,513,462
7	원세훈	서울특별시 의회 사무처 장 임명시 462,228 (00.03.31)	자치단체 국제 환경 협의 회 (ICLEI) 집행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시 2,958,082 (08.04.24)	공직 유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퇴직시 560,009 (06.08.31)	약 1년 8개월	국가정보원장 재직 2,895,168 (10.04.02)	2,398,073
8	윤증현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임 명시 511,603 (96.02.1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08)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시 2,182,387 (09.04.03)	공직 유지
		금감위원장 퇴직시 1,726,590 (07.09.07)	약 1년 7개월	가장 최근 공개액 1,994,706 (10.04.02)	455,797
9	윤진식	청와대 비서관 임명시 361,009 (97.01.06)	단국대 이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 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08)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 서관 임명시 1,966,211 (09.03.13)	7.28 총주 국 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산업대 총장 퇴직시 1,653,026 (07.08.29)	약 1년 7개월	동직 재직 2,023,377 (10.04.02)	313,185
10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 임명시 579,527 (03.05.10)	용인대 문화재대학원장(08)	문화재청장 임명시 1,120,062 (08.04.24)	공직 유지
		동직 퇴직시 816,830 (06.09.25)	약 1년 7개월	동직 재직 1,378,982 (10.04.02)	303,232
11	이만의	행자부 제2건국위 기획 운영실장 임명시 297,939 (98.12.21)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위 상근 집행위원 (06~07)	환경부 장관 임명시 1,815,042 (08.04.24)	공직 유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퇴 직시 1,459,086 (06.06.16)	약 1년 10개월	동직 재직 1,757,669 (10.04.02)	355,956
12	이인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 실 실장 임명시 57,237 (05.02.28)	조선일보 조선경제 자문단 (03)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04~07) 서강대 교수(06)	통계청장 임명시 1,425,193 (09.06.22)	공직 유지

		동직 퇴직시 1,131,196 (06.02.28)	약 3년 3개월	동직 재직 1,418,484 (10.04.02)	293,997
13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임명시 574,799 (04.04.22)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회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 회 정책팀장(07)	조달청장 임명시 1,678,126 (08.04.24)	공직 유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퇴직시 1,230,593 (07.03.28)	약 1년 1개월	국방부 차관 임명시 1,589,147 (09.03.27)	447,533
14	정동기	법무부 보호국장 임명시 900,999 (03.05.10)	법무법인 바른 공동 대표변 호사(07)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 서관 임명시 2,123,950 (08.08.22)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09.09~)
		대검 차장검사 퇴직시 1,894,519 (07.12.18)	약 8개월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 서관 퇴직시 2,295,522 (09.03.27)	229,431
15	정종환	건교부 기획관리실장 임 명시 153,000 (96.04.30)	우송대 철도건설환경공학과 교수(07)	국토해양부 장관 임명 시 898,823 (08.04.24)	공직 유지
		철도시설공단 퇴직시 441,408 (07.02.27)	약 1년 2개월	동직 재직 840,360 (10.04.02)	457,415
16	최장현	해양수산부 차관보 임명 시 714,146 (04.12.15)	자료 없음	제9대 한국컨테이너부 두공단 이사장 임명시 1,676,430 (08.08.22)	공직 유지
		해양수산부 차관보 퇴직 시 1,379,254 (08.05.07)	약 3개월	국토해양부 2차관 재직 1,752,873 (10.04.02)	297,176

1. 대통령이 회전문 인사 지양해야

○ 회전문 인사는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해당부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업무적응기간이 짧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많은 인사실패를 경험했고 인사실패가 국정혼란을 부른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인사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해충돌이 높은 회전문인사를 지양해야 한다.

○ 회전문 인사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처럼 제도적으로 회전문인사를 배제하기는 어렵고 현재 어떠한 제한제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의지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회전문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 전부를 배제하지 못하더라도 반복적인 문제가 지적되었던 법률사무소와 기업의 인사는 임명과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회전문 인사의 재산형성과정 검증되어야

○ 회전문 인사의 재산내역을 보면 퇴직후 짧은 시간에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난 경우를 다수 발견 할 수 있다. 이전 공직재임기간에 불성실한 등록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모든 고위공직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회전문 인사의 경우 특히 재산형성과정을 인사청문회 과정과 인사검증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 현재 고위공직자의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7월 스폰서검사 논란으로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 몇몇은 민정수석실도 배제하고 밀실에서 인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사 추천과 검증, 공직 기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기획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을 신설하였으나 10개월째 공석으로 있다. 거듭되는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증시스템의 보완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인사검증의 시기, 검증사항, 범위 등을 제도화,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인사검증을 실시해야한다. 지난 정부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폐기된 법률안을 기초로 ▷인사검증 대상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검증을 할 때에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명문화 해야 한다. ▷또, 검증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대상자의 배우자 존비속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이해충돌여부도 검증될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